

# “농림부, 호남 인사패싱 심각”

고위직 영남 22명·호남 6명  
박주현 의원, 제도 개선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3급 이상) 중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호남에 대한 현 정부의 인사패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사진) 의원이(비례대표)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3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현재 고위공무원 총 41명 중 영남 출신 22명, 호남 출신 6명으로 3.7배의 차이를 보였다.



로 나타났다.

도별로는 ▲경북 16명(39%) ▲경남 6명(14.6%) ▲서울, 충북 각 4명(9.7%) ▲강원, 전북, 전남 각 3명(7.3%) ▲경기, 제주 각 1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영남 22명(53.7%) ▲호남 6명(14.6%), ▲충청 4명(9.7%) ▲서울 4명(9.7%) ▲강원 3명(7.3%) ▲경기, 제주 각 1명(2.4%) 순으로

박주현 의원은 “농업농촌을 책임지는 농림부 안에서 호남 출신에 대한 인사패싱이 심각하다는 것은, 호남 출신 이개호 후보가 농림부 내 지역 갈등을 해소하면서 농업농촌의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장관 소임을 수행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재가 영남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어려운 농업농촌 살리기 위해서는 인사의 적절한 출신 지역별 배분이 필요하며, 내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적 안배를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전북경제 활성화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와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7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청년 고용정책, 획기적인 변화 시급”

김광수 의원,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발의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9%를 기록할 만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7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

제 해소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 “올드보이 귀환 안돼” vs “젊다고 잘하지 않아”

김진표, 송영길 주장에 반박... 당대표 경쟁 치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김진표(71·사진 왼쪽) 의원은 7일 경쟁 후보인 송영길(55·사진) 의원이 “올드보이의 귀환은 안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금융개혁 추진 리더십은 젊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q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해영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서 금융 개혁을 추진하는 리더십은 그러한 철학과 의지, 경험, 경륜을 가져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전날 대전·충남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젊은 나이에 경제부총리를 맡았을 때 경제를 살렸어야 했다”며 “그렇지 못했는데 다시 기회를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해찬(66) 의원을 향해서도 “당 대표를 ‘마지막 소임’이라고 전제해 당의 미래를 위해선 올드보이의

귀환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전 당대회는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역사적 선택을 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세대교체는 꼭 필요하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면서도 “지금 국민이 당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개혁의 리더십이다. 이는 해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른바 '이해찬 대세론'에 대해 “이 총리가 워낙 많은 정치 경험과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그러나 선거전이 갈수록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가 중요하다’ 이것이 대세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당의 미래를 위해선 올드보이의

‘국가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논의돼야 한다”며 “그런 경도성 발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있던 논란 속 이해명 경기지사는 문제 삼고, '드루킹' 연루 의혹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김 지사는 이 지사와 다르게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전혀 위법한 게 없다”며 “그런 점에서 김 지사는 당이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2차 소환 방침... “출석 날짜 조율중”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의 박상용 특검보는 7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소환 날짜는 김 지사 측과 협의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 추가 소환조사와 관련, 김 지사의 변호인인 김경수 변호사와 현재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소환조사는 1차 소환과 달리 포도리안에서 서지 않고 바로 사무실로 직행했으면 한다는 김 지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를 상대로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후 김 지사는 4시간30분 가까이 조사를 열람하고 검토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충분히 소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 수사에 정당히 임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측에서 유력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가’라는 질문에 “(특검 측이)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김 지사에 게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 등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게 지방 선거 협조 등을 대가로 일본 총영사 등 ‘지리’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드루킹은 육종원지 등을 통해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에 대한 인사 청탁 등 대가로 선거 개입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 모두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 교육행정기관 용역근로자

#### 정규직 전환 관련 간담회



규직 전환은 9월 1일자로 추진되지만, 현장 용역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사진)은 교육행정기관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 용역근로자(당직, 청소, 시설관리)들과 8월 6일부터 17일까지 7개 교육지원청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교육행정기관의 용역근로자들의 정

간 책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정규직 전환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역근로자와 함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최영심 의원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은 사회적 책무가 크기에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정규직화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